

## ‘언론사찰’ 방송법, 언론인의 힘으로 막았다

Broadcasting & Technique, Digital Briefing

‘방송사 사찰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5736,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을 비롯한 방송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가 해당 법안을 번안(이미 통과된 법안을 수정함) 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에 방송사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방송법개정법률안 제85조의2 4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략)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필요이상의 포괄적인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우윤근 위원장은 “조사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 입법의 소지와 함께 언론사의 자유를 과잉해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공감했다.

또한, KBS노조도 “방송사찰 결사 저지”를 위해 본사 민주광장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국회 문방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당일 최재훈 KBS 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을 투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4일 법안을 발의한 문방위 허원제 의원을 직접 만나 항의했으며, 20일에는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 해체하라’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14일에는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이나운서연협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방송단체까지 합세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도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 ‘방송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식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송인들이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국회 문방위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지난 1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허원제 의원이 직접 나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전재희 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방송인들은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여당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12월 이후 1년 넘게 법안을 심사했으면서도 언론사찰은 물론 위헌소지까지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기획] 스마트TV 시장 동향과 전망

트렌드는 무섭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오기도 하고 조금 늦게 오기도 하지만,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온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아이폰 태풍에 이어 구글의 스마트TV가 등장했다. 통신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 시장도 맥없이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 3면

### [NAB 2011] 세계 최고의 방송쇼를 경험하다

The Art of Integra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NAB는 콘텐츠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산·관리·판매·분배 및 전송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각 주요 주제별로 구분되어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방송에서 더 나아가 콘텐츠에 관한 모든 기술을 총망라한 통섭의 자리 NAB를 만나 본다. ▶ 5면

### [문보경 칼럼] 위치정보 수집,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최근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집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 했는지 애플은 답이 없다. ▶ 7면

## 언론노조, 공정방송사수 투쟁위 발족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9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편특혜저지 및 공정방송사수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말까지 총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선언문에서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막바지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하나하나의 힘은 아직 미약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며 “부족한 힘을 모아 큰 대오를 조직하여 부정할 세력, 반민

주적 권력의 언론장악 기도에 공정한언론으로써 강고히 맞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중편도 방송 추가특혜 저지’, ‘미디어랩 단일안 마련’, ‘지역MBC통폐합 거부’, ‘제작·편집 자율성 수호’, ‘방송통신의 위 박만·최진목, 김택곤 인사철하’, ‘YTN해직기자 복직투쟁’, ‘지주회사의 방송사 경영금지 법제화’ 등 7가지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시중과 한나라당의 중편특혜, 제작자율권 침해 등으로 방송계의 정기가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언론노조는 이제 ‘하나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 대한 도발’이라는 생각으로 공정방송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어떠한 농간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출범식에는 언론노조 산하 KBS, MBC, SBS, 지역MBC, 지역민방, YTN 등 각 지부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정방송 훼손의 실태를 고발했다.

먼저 임경철 KBS본부장은 “중편도 중편특혜 저지는 공영방송·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며 각오를 다졌고, 정대균 MBC수석본부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이다. 방통위와 김재철은 지역인과 지역방송인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라!”로 외쳤다. 또, 정영하 MBC본부장은 “MBC에는 지금 공정방송 훼손을 위한 역주행 계주가 벌어지고 있다. 공정방송을 되살리지 않으면 온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으며, 김대환 GTB지부장은 “민주당이 전주방송에서 노조를 탄압했던 김택곤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언론공공성과 지역언론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윤민 SBS본부장은 “지주회사는 방송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서도 노조와는 직접 대화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 언론사가 지주회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평 제56화 김성훈

런닝맨, 이번 미션은...

임무완수하겠습니다.

세상방송 강화.

이번 미션입니다.

방송사,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재정비에 적극 나서야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club.kobeta.com
- 방송과기술 magazine.kobeta.com
- 방송기술저널 journal.kobeta.com
- 모바일 방송기술저널 m.kobeta.com